

내년 국비 6조 2천억원 확보 '가시밭길'

속보=도의 내년도 국비 목표액인 6조2,000억원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 핵심 사업과 관련한 예산의 상당액이 삭감 또는 미반영된 채 정부 각 부처 예산안에 포함(본보 18일자 1·6면 보도)돼 기재재정부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통상 정부 부처 제출 예산을 삭감해 국회로 넘긴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의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각 부처가 지난 17일 기재부로 넘긴 도 관련 사업 현황을 분석해 보면 도에서 정부에 요청한

정부, 도 요청 사업비 70% 만 반영·SOC 예산 15% 감축 통보 문화올림픽 관련 예산 100억원 좌우할 기재부 심의 향후 관련 사업비의 70% 수준만 반영됐다. 더욱이 기재부가 SOC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5% 이상 줄였다는 통보를 정부 각 부처에 이미 한 것으로 알려져 등서고속도로, 동계올림픽 등 SOC 관련 예산이 상당수인 도에는 불리한 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춘천-

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 요청액의 75~85%만 부처안에 반영했다. 문체부가 '한도의 예산'으로 기재부에 넘긴 문화올림픽 관련 100억원도 기재부의 의지에 따라 좌우돼 불확실하다. 도 정치권 관계자는 "이제 관련 예산을 얼마나 편성해 주느냐. 국회로 넘어와서 증액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부터 도와도 정치권이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홍현표기자

원주~제천 복선철도 공사 일부 중단사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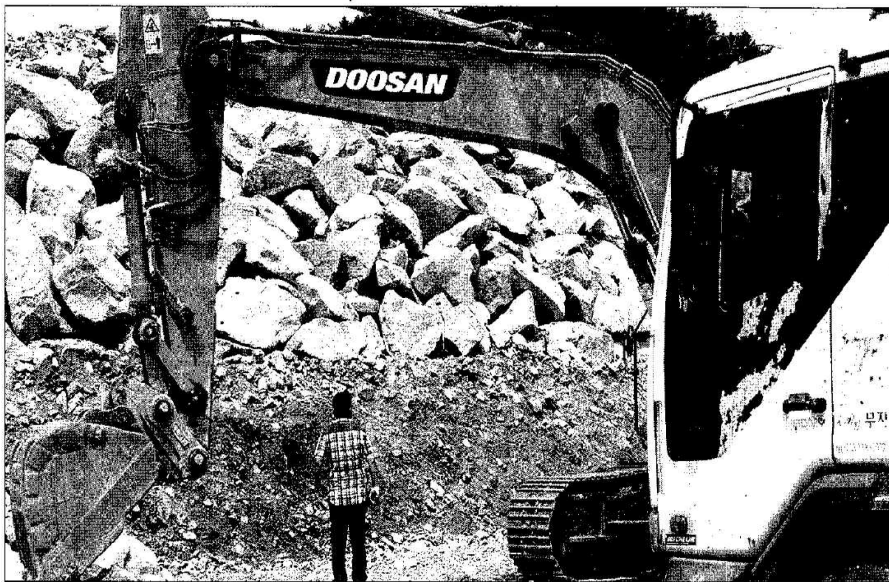
하도급업체 자금난 여파
건설기계대여금 보증 미뤄
지역 장비업체 피해 우려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철도 공사 일부 구간이 하도급 업체의 경영난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와 지역 건설기계장비 대여 업체 등에 따르면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철도 제1공구 일부 구간을 맡고 있는 A업체가 자금난을 겪고 있어 지난 16일부터 공사가 중단, 터널 공사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

더욱이 A업체는 최근까지 건설기계 장비 대여 업체와의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아 대여 업체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원주지역 건설기계대여 업체들은 흥업면 사제1·2터널, 동화터널, 남원주역 정거장 등의 공사를 맡고 있는 A업체가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받고서도 제대로 운영이 안 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치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는 정부가 2013년부터 건설기계 대여금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장비대여 업체의 한 대표는 "만약을 대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철도 공사 일부 구간이 하도급 업체의 경영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18일 공사현장에 포클레인 등 중장비들이 멈춰 서 있다. 원주=오윤석기자 papersuk1@kwnews.co.kr

비해 지급보증을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업체 대표는 "주유소와 식당에도 제대로 비용이 지급되지 않아 공사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며 "A업체가 잘못되면 원청이 지급을 한다고 해도 50% 정도밖에 안 돼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업체에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현장의 장비들을 세우들 수 없어 원청과 함께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만큼 곧 해결될 것"이라며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상황을 파악해 풀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관계자는 "A업체가 경영난으로 일부 구간에

서 공사를 못 하고 있어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개통에는 차질이 없지만 지역 업체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1년 착공된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철도는 2018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원주=원상호기자



◇최원식씨



◇박병진씨

건설교통국장에 최원식 내정
올림픽본부 건설단장 박병진

19일 명예퇴직하는 최기호 도
건설교통국장 후임에 최원식 동
계올림픽본부 건설추진단장이
내정됐다. 최 단장은 지난 15~17
일 진행된 직원의견 조사에서 상
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
로 알려졌다.

앞서 최문순 지사는 신임 건설
교통국장은 직원들의 의견을 적
극 반영해 발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최 단장의 후임에는 박
병진 지역도시과장이 준국장급
으로 승진, 이동한다. 도는 19일
건설교통국장 인사를 단행할 예
정이다. 이성현기자 sunny@



김대호 도상공회의소협의회장

18일 도상공회의소협의회장에 추대된 김대호(54) 춘천상의 회장은 “도내 상공회의소의 역할
과 기여도를 확대하고 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50대의 젊은 피’로 이끄
는 김 회장은 “열악한 경영환경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부터 강원경제를 이끌어가는 대기업에 이
르기까지 회원사의 이익 증대에 힘쓰겠다”며 협의회의 활동 폭이 더욱 넓어질 것을 예고했다.

“지역경제 활력 주는 정책대안 적극 제시”

- 기쁨, 메르스로 지역경제가 불
황입니다

“지역에 산재한 현안을 조금 더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도내 상의에서
순회하며 회장직을 맡기로 했습니
다. 우선 정부와 지자체가 신뢰를 바
탕으로 안정적이며 일관적인 경제정
책의 교감이 이뤄져야 합니다.

포퓰리즘에 흔들리지 않는 보편적
이며 상식적인 경제구조가 갖춰질
수 있도록 상공인의 선진 경영의식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 경제구조가 취약한 강원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으로 회원기업의 경영마인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선 내 고장 지



조성이 급선무입니다. 또 지역경제
에 활력을 주고, 기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대안도 제시할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회원업체 서비스 강
화’를 위한 채널을 강화하겠습니다.”

- 협의회장 재직 시 목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과 일학습 병행제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청장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강원인력개발원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도내 7개 상의 관할구역 현안과
제를 취합해 대정부 건의 등 산적한
우리 지역의 현안과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과 상공인에게 당부할 말은

“지역 발전과 강원지역 기업활동
을 강화하고, 개별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려고 합니다. 도
민과 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
랍니다.” 남궁현기자 hyunng@

■프로필

△춘천고, 한국외대 영어과 졸업
한림대 경영학 석사 △대건(주) 대표
이사 △법무부 법시량위원 춘천지역
연합회장 △춘천상의 22대 회장



제39차 강원도상공회의소협의회가 18일 삼척상의 회의실에서 도내 7개 상의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삼척/전제훈

제3대 강원상의 협의회장 김대호씨

회장 순번제 도입·선상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 백지화 촉구

제3대 강원상공회의소 협의회장에 김대호 춘천상의회장이 추대됐다.

특히 이날 협의회는 크루즈 선상 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 백지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 청와대, 강원도 등 11곳에 제출했다.

도내 상공회의소(이하 상의)는 18일 삼척 상의에서 춘천·원주·강릉·동해·삼척·태백·속초 등 7개 상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9차 강원상의 협의회를 갖고 김대호 춘천상의 회장을 협의회장으로 추대했다. 또 강원상의 협의회장 임기는 3년이지만 3대 협의회장부터 임기를 1년으로 줄이는 대신 1년씩 춘천·원주·강릉 순으로 협의회장을 맡기로 했다.

부협의회장은 1년간 이해규 원주상의회장이 맡게 됐으며 회장 임

기와 같이 1년씩 지역 상의별로 맡게 된다.

한편 강원상의는 이날 '크루즈 선상 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 반대 건의문'을 채택했다.

강원상의는 건의문에서 "선상 카지노 내국인 허용은 폐광지특별법이 종료되는 2025년까지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폐광지라는 특수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카지노를 합법화할 경우 강원지역 전체를 공멸로 빠트리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양수산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했으나 내국인 출입허용에 대해서는 일절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강원 상공인들은 내국인 출입 선상 카지노 추진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삼척/전제훈·김호석

“경제위기 극복 구심 역할하겠다”



김대호(54) 춘천상공회의소 회장이 제3대 강원상공회의소 협의회장을 맡게 됐다. 취임 소감을 들어봤다.

-막중한 임무를 맡게된 소감은.
“춘천상공회의소(이하 상의) 회장 임기 3개월여만에 막중한 자리를 맡게 돼 부담도 되지만 지역상공회의소 회장들이 추대해주신 만큼 열심히 일하겠다. 무엇보다 내수경기가 어려운 이때 강원도내 상공인들의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역점으로 추진하고 싶은 일은.

“강원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것이 선상카지노 승인 여부다. 승인 땐 강원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강원 상공인이 합심해 반대하겠다.”

-도내 상공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최근 메르스와 가뭄으로 강원경제가 매우 위축된 상태다. 지역경제 위기 때 이를 타개할 수 있도록 강원상의가 지역대표 경제단체로서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 도내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현장 목소리를 관계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 김호석

“발주처 횡포 근절” 말뿐... 바뀐게 없다

전경련, 건설분야 공공계약제도 개선 방안

발주처가 책임져야 할 민원까지 시공사에 전가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미지급 여전히 비밀비재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를 하며 민간의 의욕도 꺾고 있다... 공공기관장들이 앞장서 불공정거래 행위와 입찰비리를 뿌리뽑도록 해달라.”

박 대통령이 지난해 5월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한 이 같은 당부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설분야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분야 공공계약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보고서에 소개된 공공기관 불공정거래 사례는 다양했다.

먼저, 발주처가 책임져야 할 민원을 입찰안내서 등을 통해 시공사가 해결하도록 떠넘기는 ‘민원 해결 책임 전가’ 문제가 드러났다.

A공사는 공사 관련 인허가 비용 일체를 건설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가 하면, B공사는 지질조사, 문화재지표 조사 등을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조사토록 했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 사례도 비밀비재했다. C공사는 전체 계약 기간 1500일 중 270일을 휴지기로 설정하고 그 기간에는 계약상대자가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윤석기자 ysys@

현행 계약법령은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공사기간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실비정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편법을 사용해 법망을 피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또 설계변경을 할 때 계약금액 부담 조정, 계약 특수조건 등을 통한 계약변경이나 소송 제한 등 시공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 절감을 이유로 근로자 안전을 포기한 기관도 있었다. D공사는 안전관리비 적용 요율이 높은 공사에 낮은 요율을 적용토록 요구했다. 예산 절감 실적을 위해 ‘건설공사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정 요율’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다.

보고서에서는 예정가격 공개로 발생하는 운찰(運札) 논란과, 공공기관이 분쟁 발생 시 중재보다는 기간이 긴 소송을 선호해 업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부 발주기관 행태도 지적됐다.

전경련 유환의 본부장은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 계약 특수조건, 내부 지침 등을 개정·폐지하고, 공공건설분야에서 적절한 공사비를 책정하는 관행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한 공사비에 막힌 평창올림픽 ‘관문’

개·폐회식장 건립공사 PQ 접수 업체 0... 차질 불기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얼굴’이 될 올림픽플러자(개·폐회식장) 건립공사가 유찰됐다.

시공격자 부담에 단 1개의 건설사도 입찰참가 의지를 밝히지 않아, 성공 개최 준비에 또다시 차질이 우려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조립정을 통해 이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 접수를 마감했으나, 참여사가 없어 잔여 입찰일정이 취소됐다.

이 공사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

과 도저히 실행을 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행률은 각기 다르지만, 현재의 공고내용으로는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또다시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최근에는 강원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및 보평 스피노 경기장 등이 정상 개도에 올랐는데, 정작 개·폐회식장 건립은 지연될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올림픽조직위는 일단 1회 유찰인 만큼 곧바로 재공고를 내고 다시 한번 시공사 선정 임질을 추진할 방침이다.

홍승권기자

계리 고원출연장 일원에 6만4800㎡ 규모의 개·폐회식장과 올림파크호보관, 메달플러자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추정금액은 940억원 규모다.

텐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집행되며 낙찰자 결정을 위한 기중치는 설계 70%대 가격 80%가 적용된다.

입찰공고 전후만 하더라도 1~2개 업체가 입찰참가 여부를 두고 고민을 했으나, 자체 사업성 분석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는 모두 참여계획을 접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월거 후 사후회용을 비롯해 공기 대비 공사비 등을 분석한 결

국토부, 발주처 불공정관행 개선책 다음달 ‘윤곽’

국토교통부가 발주기관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까지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발주기관과 건설업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TF’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공공공사 건설현장에서는 발주기관이 부당특약을 통해 설계변경 시 공사

금액을 삭감하거나 인·허가 비용을 건설사에 부담시키는 등 다양한 불공정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3월 TF를 가동하고 불공정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계약 사례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산하 공기업의 불공정 특약이나 관행을 발굴한 후 이들 기관에 시정토록하고 있다.

현재 TF에 참여하고 있는 발주기관은 국토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이다. 국토부는 이 TF를 통해 이들 발주기관이 불공정계약 관행을 개선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불공정계약 개선작업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바로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던 진작에 다 개선됐을 것”이라며 “발주기관에 따라 수용과

반발 정도와 반응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발주기관의 저항에도 불공정계약 관행 개선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발주기관을 별도로 접촉해 불공정계약 조건이나 행태를 시정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꾸준한 노력 끝에 발주기관의 태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기관의 태도도 나아지고 있다”며 “7월 정도면 TF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

대한건설협회-새누리당 정책위 간담회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앞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는 18일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중복제 재완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건협 “입찰참가 제한 제도 개선해야”

새누리 “당정협의, 문제 빨리 해결할 것”

“건설업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당정 협의를 거쳐 건의사항이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 건설경제가 회복해야 경제가 산다고 생각한다.” -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부정당업자 처벌이 건설산업 간판을 흔들고 있다. 해외건설 시장 진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정책을 건의하게 됐다. 건설산업이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주길 부탁한다.” -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새누리당과 건설업계가 중복·과잉 처벌 논란을 빚고 있는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건설업계는 과거 불공정 관행을 청산하고 해외건설 시장 진출 등 국가 경제 회복의 견인차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요청했고, 새누리당은 당정 협의 등을 통해 해묵은 과제를 개선할 대안 마련에 노력하기로 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18일 여의도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 의장과 김태원 의원(정책조정위원장, 김창남 정책국장, 유병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는 간담회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관련 법률 개선 방안을 내놨다.

정 대표는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

중복·과잉처벌 등 부담가중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철회 환경세 일몰기한 연장 등 건의

도는 사안의 경중이나 위반 정도에 관계 없이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분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의 발주기관에서 제재를 처분하면 최대 2년간 우리나라 모든 공공입찰 참여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한 차례의 입찰담합 행위로 모든 공공공사의 입찰 참여를 차단하는 현행 규정을 ‘해당 발주기관’으로 제한하고,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등 다른 제재를 받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이다.

이어 정내삼 대한건설협회 부회장은 “100대 건설사 가운데 52개사가 1조원 이상의 과징금 그리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고 있다”면서 “게다가 영업이익보다 많은 과징금 부과로 대기업마저 정상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 대출로 과징금을 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제 회복의 견인차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기처분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해제 등 특별 온전조치’ 등의 정책적 배려를 요청했다.

아울러 이대성 임원개발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방안이 종합건설업체

98%가 중소기업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대책인 만큼 새누리당이 바로잡아 달라는 호소를, 소재철 장한중합건설 대표는 하도급공사 예정가격 공개 등 과도한 규제 개선 요청을, 이병화 두산건설 대표는 연말 폐지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기한을 2018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최병수 한라 대표는 △공공공사 분리 발주 의무화 방안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 재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폐지 △발주처 귀책사유에 따른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건설업계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파이낸싱(자금 조달) 지원책,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따른 주택 시장 불안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 같은 건의에 대해 원유철 정책위 의장은 “대통령께서도 해외건설 시장이 일 자리를 만든다고 했다. (새누리당) 정책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 간접비 등도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화답했고, 김태원 의원은 “(건설업계의 건의안은) 어제오늘 이야기된 내용이 아니다. 정책위 의장이 당 지도부와 협의해 묵은 숙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한승구 계룡건설산업 대표, 임충희 GS건설 부사장, 이덕인 정일종합건설 대표이사, 오인철 태성종합건설 대표이사, 박재운 강산건설 대표이사, 류삼현 서평종합건설 대표이사, 김진태 은세건설 대표이사, 김홍수 건설산업연구원 원장 등도 참석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